

2021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2021. 10.

한 국 은 행

- 목 차 -

(한국은행 소관 : 26건)

1.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발생 방지 필요	1
2.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필요	2
3.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권한 강화 필요	3
4. 현금결제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	4
5. 금융기관의 건전성·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5
6. 원화의 국제화 방안의 장기적인 추진 필요	6
7. 외화자산 운용 및 관리 개선 필요	7
8. 코로나19 및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필요	10
9.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검토 필요	12
10.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의 전환 필요	13
11.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14
12.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 필요	15
13. 국채 매입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필요	16
14. 금융증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	17
15.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	18
16.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필요	19
17.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
18.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22
19. 원활한 화폐수급 및 화폐관리 강화 필요	23
20.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및 지표의 정확성 제고 필요	25
21.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필요	27
22.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필요	28
23. 한국은행 재무구조 개선 필요	29
24.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수행 및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필요	30
25. SPV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필요	31
26. 통화정책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및 정보공개 강화 필요	32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발생 방지 필요</p> <p>저금리 기조 하에서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한계 및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년 들어 경기 회복세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빨라진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 크게 확대하였던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음</p> <p>○ 금년 상반기중에는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종료</p> <p>○ 지난 8월에는 국내경제가 4%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p (0.5→0.75%) 상향 조정</p> <p>○ 그러나 전반적인 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 지원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은 강화</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이례적으로 확대하였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p> <p>○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비롯하여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임</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2.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필요</p> <p>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향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검토하는 한편 청년층의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상황을 조사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p> <p>한국은행에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누증요인과 관련 리스크 등을 점검·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p> <p>○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회의(연 4회)에서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여건을 점검·분석하고 있으며,</p> <p>금융안정보고서(매년 6월·12월, 법정 보고서) 작성, 금융안정 상황점검(매년 3월·9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음</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청년층의 가계부채 현황과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보고서(2020.12월)」와 「금융안정상황(2021.9월)」 등을 통해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균형 누적 요인 및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더욱 강화할 계획</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3.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권한 강화 필요</p> <p>IMF가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한국은행의 감시 권한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점, 최근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현재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p> <p>*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양경숙 의원(2020.11.20일) 및 김주영 의원(2021.2.3일)이 각각 대표 발의</p> <p>○ 양 개정안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모두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p> <p>○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제정권, 위험관리기준 제정권, 시정요구권 등 정책수단을 확충</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정부뿐 아니라 법조계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4. 현금결제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p> <p>낮은 현금결제 비중으로 인하여 금융 취약층의 현금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거스름돈 계좌입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노령층 등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현금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ATM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은행권과 공동으로 추진중임</p> <p>○ 현재 ATM의 설치·운영 정보의 DB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4/4분기중 스마트폰 앱(위치, 장애인 지원여부 등 제공)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한편,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현금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ATM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은행 간 ATM 운영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p> <p>또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5. 금융기관의 건전성·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p> <p>은행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고 비이지이익의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금융기관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다변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를 점검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하여 왔음</p> <p>○ 연 4회(3·6·9·12월)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회의」에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과 복원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금융안정보고서 작성(6·12월) 및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도자료 배포(3·9월)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에 대해 조기경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p> <p>○ 이외에도 공동검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정책제언 등을 지속하여 옴</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복원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p> <p>○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의 협의체를 통해 정부·금융당국과 관련 이슈 사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적절한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6. 원화의 국제화 방안의 장기적인 추진 필요</p> <p>수출 결제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역결제의 원화 활용도 제고 방안 및 원화의 국제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그동안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원화 활용도 및 원화 국제화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음</p> <p>○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국과의 원화 거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p> <p>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에서 원화, 위안화 등 역내 통화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정문 개정안을 마련(2020.9월, 개정 협정문은 2021.3.31.일 발효)</p> <p>또한 터키중앙은행과 양자간 자국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2021.8.12일)하였으며, 동 통화 스왑을 활용하여 무역대금을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원화 국제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7. 외화자산 운용 및 관리 개선 필요</p> <p>외화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산 확대에 유의하는 한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운용수익 뿐 아니라 운용수익률 공개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며, 재무현황 발표 시 외국환 평가손익을 공표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유동성 및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가운데 수익성도 고려하고 있음</p> <p>○ 운용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다변화 등을 위해 외화자산 일부를 위탁운용</p> <p>○ 위탁자산 규모는 국제금융시장 상황, 외환보유액 운용목적, 위탁운용사의 운용역량과 전문성, 중장기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거쳐서 결정</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리스크 분산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통화 다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왔음</p> <p>○ 한국은행 외화자산의 통화구성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경상지급, 외채 통화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p> <p>— 미 달러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경상지급 및 외채 통화구성에서 미 달러화 비중이 높은 데다, 안전성과 유동성이 우수한 미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외화자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기인</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외환보유액의 보유목적에 충실한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중장기적 추세,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적정 통화별 비중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한국은행은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외화자산 운용·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국회에 외화자산 운용수익 규모도 제공하고 있음 ○ 외화자산의 상품·통화별 구성, 리스크 관리체계, 위탁자산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수준이 여타 중앙은행에 비해 낮지는 않음 ○ 앞으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정보공개 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외화자산 운용·관리 상의 투명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화 자산·부채의 기말 외환평가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차대조표계정인 외환평가조정금으로 계상하여 일반에게 공시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로 운용하는 것이 목적인 외환보유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외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실익이 없음 ○ 외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경우 환율에 따라 당행 수지가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어 외환보유액의 안정적인 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p><input type="checkbox"/> 외환평가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는 없으나, 연차보고서 대외발표시 미실현된 외환평가손익이 대차대조표로 계상되고 있는 점 등을 기자 설명회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도록 더욱 노력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8. 코로나19 및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필요</p> <p>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위기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이고, 국제적으로도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미국의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제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었음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이 부문별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 등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맞이할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점검해왔음 □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간 관세 인상 및 불확실성 증대를 통해 글로벌 교역감소를 야기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행은 양국간 무역분쟁이 글로벌 교역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대외에 발간 □ 한국은행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설비투자 및 수출을 촉진하고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2019.8월) ○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5조 원 지원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세 차례(2020.3월, 5월, 10월)에 걸쳐 18조원 증액하고 대출금리를 0.5~0.75%에서 0.25%로 인하(2020.3월)하였음</p> <p>○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2020.3월) 및 「소상공인 지원」(2020.10월) 프로그램을 신설</p> <p>○ 2021년중에는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기한을 6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3조원 증액하여 6조원으로 운용(2021.10월)</p> <p>□ 한편,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2019년에 도입하였던 무역금융(1조원) 및 설비투자(5조원) 지원조치는 2021.9월말 종료할 예정</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9.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검토 필요</p> <p>우리나라의 화폐단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으므로 리디노미네이션 및 고액권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p>	<p>□ 리디노미네이션 실시 및 고액권의 도입은 화폐사용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 소기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p> <p>○ 한국은행은 현재 리디노미네이션 실시나 고액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엄중한 최근의 경제현실 하에서 화폐제도 변경을 논의하기보다는 경기회복세 지속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됨</p> <p>□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발권 정책 수립 사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가운데 국민들의 화폐사용 습관, 제도 변경시의 편의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10.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의 전환 필요</p> <p>저금리·저물가 기조 하에서 물가안정목표치의 조정, 물가안정목표제의 개선 방향 또는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최근 미국이 평균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물가목표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등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주요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미연준 방식의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글로벌 공감대 미형성, 경제구조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검할 계획 □ 앞으로도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모색할 예정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의 전략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상황)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11.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p> <p>최근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 이외에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수단 확충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의 책무 확대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운용뿐 아니라 국내 금융·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요 이슈 등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2021.1월)하여 외부연구용역을 수행 ○ 국회 기재위가 한은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등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 고용안정 책무 추가 관련 한은법 개정 논의는 우리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책무 추가 시 이에 따른 기대효과, 제약요인,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한국은행은 그간의 내부 연구결과와 외부 자문단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2.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 필요</p> <p>거시건전성 감독 기능 강화 및 다양한 경제 조정 수단을 확보하고 거시금융안정위원회(가제)를 설립·운영하는 등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취약성 및 복원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금융시장 안정화조치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개최하여 금융안정 여건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계부채 점검반」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내 금융·경제 안정 관련 주요 현안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효과적인 금융안정 책무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동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3. 국채 매입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필요</p> <p>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하에서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하여 그 필요성 및 부작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국채 매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8조(공개시장 조작)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음</p> <p>○ 국고채 매입 시에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RP매각 대상 증권 확보,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필요시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입해 왔음*</p> <p>* 2020~2021년중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대응하여 국고채 매입을 실시(2020.3~2021.6월중 총 17.0조원)</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고채수급 불균형 등으로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시장안정화를 위한 국고채 매입을 적기에 실시할 계획임</p> <p>○ 이 과정에서 유통시장 매입 원칙을 견지하여 재정의 화폐화 논란 등 국채 매입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유의할 예정.</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14.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p> <p>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역별 배분 및 금리 조정, 부당대출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은행 금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한도 확대 및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음</p> <p>○ 2020년중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18조원 증액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0.5~0.75%에서 0.25%로 인하(2020.3월)</p> <p>—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시 10.4조원을 지방에 배정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방중소기업을 집중 지원</p> <p>○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특별지원한도의 운용 기한을 2년 연장(2021.8월말 → 2023.8월말)</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위규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은행 보고에 대한 심사과정 개선, 위규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p> <p>* 사전 전산심사 시스템 구축(2020.10월) 및 위규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 사후관리 관련 지원 배정액 수혜 배제(2021.4월)</p> <p>** 공동검사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였으며, 한국은행 지원금리와 은행의 대출 실행금리간 차이의 추가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운용 과정에서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고 위규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p> <p>한국은행의 금융지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 data-bbox="339 293 786 383">15.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p> <p data-bbox="389 477 786 790">경제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시각에서 경제전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02 293 1471 465">□ 한국은행은 매분기마다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와 향후 경제여건에 대한 전제에 기반하여 경제전망치를 산출·발표하고 있음 <li data-bbox="802 499 1471 719">○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질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도 비슷한 상황임 <li data-bbox="802 752 1471 1010">□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망에 이용되는 지표를 확충하고 다양한 예측모형을 활용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li data-bbox="802 1043 1471 1216">○ 고빈도자료(high-frequency data)를 포함한 모니터링 지표를 확충함으로써 경기판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li data-bbox="802 1249 1471 1384">○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에 더해 코로나 19의 장·단기 영향을 반영하는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전망에 이용하고 있음 <li data-bbox="802 1417 1471 1590">□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경제분석 및 예측모형을 확충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전망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음 <li data-bbox="802 1624 1471 1843">○ 한편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대외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경제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장기전망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li data-bbox="802 1877 1471 209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익익년도 전망을 종전보다 2개월 앞당긴 매년 11월에 발표하는 등 전망시계를 연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6.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필요</p> <p>기획재정부의 한국은행 예산에 관한 소관을 예산실 및 공공정책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p>	<p>□ 한국은행은 한은법에 따라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이하 “급여성 경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국(거시정책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p> <p>○ 기획재정부의 급여성 경비예산 승인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해도 문제가 없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7.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 필요</p> <p>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며,</p> <p>상한액 초과 주식 보유 등으로 인한 제척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 결과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은법상 금통위원의 자격요건으로서 그 경험·지식의 대상인 금융·경제·산업은 노동*도 포함한 종합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음</p> <p>* 2020년 국정감사 시 김주영 의원 질의(금통위에 노동계 대표를 포함, 회의록 90쪽), 종합감사 시 김경협 의원 질의(금융통화정책의 결정 과정에 고용·노동 전문가가 필요, 회의록 75쪽) 및 이에 대한 답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는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작성하였음</p> <p>○ 통화신용정책은 국가경제 전체를 보고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인 만큼 금통위원은 이미 노동분야를 포함한 경제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됨</p> <p>○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경우에도 금통위원(또는 정책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주로 금융·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명시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금통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여부는 제도의 장·단점, 국내외 입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p> <p><input type="checkbox"/> 위원 임명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금통위원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input type="checkbox"/> 현재 금통위 회의결과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명, 구체적인 내용을 의사록,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18.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p> <p>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상당 수준 진척되었으므로, 한국은행도 이에 맞추어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 혁신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 및 준비업무를 확대해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폐동향분석반 신설(2021.7월) ○ CBDC 모의실험 연구 착수(2021.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C 기본 기능의 기술적 구현, 확장 기능 및 신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국은행의 각 책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 CBDC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의 ‘지급결제의 미래’ 실무그룹, 국제결제은행 혁신허브(Innovation Hub) 내 ‘CBDC’ 실무그룹 등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CBDC 발행 도입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차질 없이 즉각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예정임</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19. 원활한 화폐수급 및 화폐관리 강화 필요</p> <p>위조지폐 방지 대책, 손상 화폐를 줄이기 위한 방안 및 폐기화폐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화폐관리를 강화하고, 5만원권의 환수율이 저조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한국은행은 원활한 화폐수급 및 위조지폐 방지 등 적극적 화폐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p> <p>○ 주요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활실성, 대면 상거래 부진 등으로 고액권 위주의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p> <p>— 이와 같은 화폐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0년 중 21.9조 원, 2021년 1~8월중 11.6조 원이 순발행되었으며, 그 결과 5만원권 환수가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음</p> <p>— 다만 금년 들어서는 화폐 환수율이 전년대비 2.5%p 상승하는 등 환수율 하락세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환수율이 추가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p> <p>○ 위조지폐 방지 및 손상화폐 경감 등 화폐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된 화폐 재활용 방안을 모색</p> <p>— 위조지폐 식별요령, 「돈 깨끗이 쓰기」 등 대국민 홍보를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p> <p>— 화폐폐기물 무상수거 업체 공고를 통해 폐기화폐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2021.5월)</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 앞으로도 적절한 화폐공급 및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화폐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p> <p>○ 기공급된 화폐가 원활히 환수될 수 있도록 보관 능력을 확충하고,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위조지폐를 방지하고 및 손상화폐를 경감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20.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및 지표의 정확성 제고 필요</p> <p>잠재성장률, 지역상품권 등 주요 경제현안 및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개발하는 등 분배지표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p>	<p>□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왔음</p> <p>○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국내외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물경제의 부문별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였음*</p> <p>*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국가간·국가내 부문간 차별화된 충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BOK이슈노트, 2020.12월) 「향후 pent-up 소비 가능성 점검」(BOK이슈노트, 2021.4월)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BOK이슈노트, 2021.9월)</p> <p>○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음*</p> <p>*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BOK이슈노트, 2021.8월)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BOK이슈노트, 2021.9월)</p> <p>○ 고령화, 생산성 둔화, 자영업 문제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p> <p>*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BOK이슈노트, 2020.12월)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BOK이슈노트, 2021.3월)</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자문단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외부연구용역을 진행중임</p> <p>○ 금년 4~6월중(3회) 학계, 연구원 등 대내외 전문가(6인)로부터 노동소득분배율 공표방법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음</p> <p>○ 공모를 거쳐 금년 8월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산식에 대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함</p> <p>□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주요 경제현안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음</p> <p>또한 외부연구용역 결과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개발하는 등 분배지표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21.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필요</p> <p>학술연수, 임직원대출, 퇴직가산금, 직원 주거지원용 부동산 등 임직원에게 대한 복리후생 수준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복리후생제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용 부동산 입주직원이 적정 수준의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선택사용료 할인제도를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부동산은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여 운영(2021.8월말 현재 공실률 0%) ○ 임직원 대출의 경우 직원이 보증보험료, 근저당권 설정비 등 채권보전비용을 직접 납부 ○ 학위 미취득자, 의무복무기간 미복무 등의 직원에 대한 학술연수 사후관리 기준을 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 ○ 특별휴가를 보유한 직원들의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사합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22.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필요</p> <p>지원인력이 과다하므로 적정 수준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부출신 인사의 적극적 영입 및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등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지원업무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조직 축소, 정원감축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p> <p>○ 2019~2021년중 연수운영 조직 축소, 일부 직책 폐지, 지원업무 정원 감축 등을 시행</p> <p><input type="checkbox"/> 더불어 2021.7월에는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최소 구성비율 제한규정을 신설</p> <p>○ 한편, 한국은행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낮은 것은 과거 신입직원 중 여성 입행자 수가 많지 않았던 데 주로 기인함</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업무 디지털화, 프로세스 개선, 직무 재분류 등을 통해 경영지원부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조직내 성별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23. 한국은행 재무구조 개선 필요</p> <p>저금리 기조에 따른 흑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납부액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국제금융센터 분담금 지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됨 ○ 한국은행은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30%만을 적립하는 반면 순손실 발생시에는 전액 적립금으로 보전하므로 재무구조가 쉽게 악화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 한국은행 수지의 경우 대규모 손실 발생시 정부예산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이는 국민 부담으로 귀결 □ 한국은행의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편성되며,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예산의 경우 한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있음 ○ 아울러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 인건비 현황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음 □ 한국은행은 정부(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행의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분담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향후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등을 통해 사원분담금 증액, 유료회원사 확대 등 국제금융센터의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24.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수행 및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필요</p> <p>지역별 경제력과 인구·산업구조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본부가 적절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지역본부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통화신용정책의 효과적 수행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의 질적수준을 강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지역경제 동향 및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 「지역경제보고서」를 연 4회 발간(3, 6, 9, 12월)</p> <p>○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자료를 작성·제공*</p> <p>* 「전북지역 신성장동력으로의 탄소섬유 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2020.11월),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2021.3월), 「부산경제의 코로나19 위기 회복여건 점검」(2021.6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동향과 시사점」(2021.4월),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광주전남을 중심으로」(2021.7월), 「충남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2021.7월), 「경기도 신성장산업 클러스터의 효과적 조성을 위한 입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2020.12월) 등</p> <p><input type="checkbox"/> 또한 당행 지역본부 조직 및 인력 운용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임</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지역별 경제력과 인구·산업구조 등 지역상황을 반영한 조사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역본부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25. SPV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필요</p> <p>SPV가 매입한 채권 중 운수업 및 도소매 등 어려운 업종 및 저신용·비우량 채권의 매입 실적이 저조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업종 및 저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p>	<p>□ 한국은행은 저신용기업에 대한 신용경계감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SPV의 비우량채 매입 비중을 확대하였음</p> <p>○ SPV의 비우량채 매입 가능 비중을 7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 조치(2020.12월)</p> <p>□ 한편, SPV는 일반기업의 회사채·CP를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021.8월말 현재 SPV의 도소매업 및 운수업 지원 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13.0%를 차지</p> <p>* SPV는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어 운용</p> <p>○ 이는 전체 회사채·CP 발행 잔액에서 도소매업 및 운수업종 발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13.6%)과 유사한 수준</p> <p>□ SPV의 회사채·CP 매입은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및 회사채·CP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p> <p>□ 앞으로 한국은행은 SPV를 통해 비우량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투자 적격 회사채·CP를 발행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편,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회사채·CP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26. 통화정책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 및 정보공개 강화 필요</p> <p>통화정책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 연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대외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각종 경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연구보고서 공개율 제고 등 보유정보의 공개를 확대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 소통 노력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 ○ 당행 정책 및 업무 운영, 주요 보고서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행에 참고 ○ 주요 정책과 당행 간행물 등을 경제주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부문의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어플리케이션(모바일 앱) 도입, 홈페이지 화면 개편 등도 추진하여 국민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